

# 국민투표법 처리 오늘 시한...6월 개헌 무산되나

### 실무절차 압축 진행엔 27일까지 연장 해석도

### 당청, 개헌 무산선언 가능성...불발해도 정부안 표결해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2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의 분위기는 요지부동이다. 일단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적 타결 ▲6월 개헌 무산 ▲정부안 표결 강행 ▲개헌시기 연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3일이지만 실무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27일까지로 시기를 늘릴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 경우

국민투표법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더 갖게 된다. 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여야는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협상할 시간을 벌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볼 때 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6월 개헌이 불가능해질 경우 민주당과 청와대가 24일께 야에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여야가 개헌 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해도 국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인 비관적 전망과 함께 지방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50%)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반영돼 있다. 만약 당청이 개헌 무산 선언을 할 경우 민주당이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공표하고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개헌이 재론되는 시기는 2020년 총선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민투표법의 시한 내 개정이 불발돼도 국회는 문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헌안에 대해 표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헌법 130조에 따라 국회는 5월24일까지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야당이 정부 개헌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지 불투명한 데다 실제 표결이 진행돼도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국민투표법의 시한 내 개헌 불발 시 6월 국민투표는 불가능하지만 여야가 개헌 시기를 6

월 지방선거 이후 특정 시점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비록 여야가 개헌 시기나 내용을 놓고 입장차가 있지만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데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도 높아 개헌 동력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 9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6월 개헌이 무산될 경우 비상대책으로 '선(先) 개헌 내용 합의, 후(後) 개헌 시기 조절'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연내 개헌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연 정부 개헌안은 여야의 요청에 따라 철회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개헌 시기를 늦추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드루킹 특검' 문제로 대립하는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여야가 개헌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6월 개헌 불발의 출구를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

## 6·13 선거 현장

### 구청장·시의원·도의원 후보

### 문인 "청년창업 종합지원제도 마련"



문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청년들의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창업 종합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청년 창업자의 3분의 2가 5년 이내에 폐업하는 현재의 지원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실패한 창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희망 펀드'와 '재기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입학 계약에 관한 북구 조례 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생과 청년창업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창업주택 셰어하우스 지원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택 '유치원·초교 등하굣길 안전대책' 발표



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광주의 현황을 점검하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 아동의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광주에서 행정안전부 안전등급 5등급을 받은 곳은 동구뿐으로, 동구가 광주에서 교통안전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뽑히는 불명예를 안았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3월 개학과 함께 각종 체험학습, 아이들의 외부 활동 증가로 인해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다"고 강조했다. 또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통학버스 관련 위반 등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더욱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미정 "흙수저도 꿈 이루는 공정한 사회 만들 것"



박미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동구 2선거구, 지산동·서남동·학동·학운동·지원동) 예비후보는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다.

박 후보는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성실히 노력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 공정한 노동자도 능력을 갖추면 대학교수 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자신의 두 손과 두 발로 일하고 살아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누군가 정치를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박 후보는 "선거사무소가 주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동구발전을 준비하는 소중한 장소인 만큼, 개소식부터 생활정치에 참여할 주민들이 찾아 주시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 정순열 청년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5대 공약 발표



정순열 민주당 전남도의원 고흥2선거구 후보는 최근 고흥군 도양읍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 후보는 "군의원 등을 지내며 올바른 행정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왔고, 군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고흥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소통과 올바른 정책제시로 전남도와 고흥군,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도양읍 북촌리 해안도로와 피항용 방파제 신설 ▲출향 향우 우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인프라 구축 ▲농수축산물 판매 지원시스템 구축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한 농어촌 개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박정욱·오광록 기자 jwpark@kwangju.co.kr

## 야3당 오늘 드루킹 특검·국조 논의

###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

### 당대표·원내대표 6인 회동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 한 자리에 모인다.

22일 야 3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야 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 대상은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의 조배호 대표·장병완 원내대표다.

이 6인 회동은 '드루킹 정국'에서 야당이 본격적으로 대어 연합전선을 형성하려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의석수로도 야 3당의 공조가 성사될 때 민주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당 116석과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을 합치면 제적 과반이 넘는 160명이 된다.

그러나 '드루킹 공조'가 현실화되기까지는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일단 야 3당은 드루킹 특검 실시를 공통으로 요구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친박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특검을 안 하면 국회 보이콧"이라며 특검을 국회 정상화와 연계시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원회는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공동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당장 개최를 요구하며, 다음 주부터 국회의 관련 상임위를 열어 민생 문제도 처리할 것을 야당이 같이 요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화당은 김·경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최근 특검을 강력히 요청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민주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별도 특검법을 아권 공동발의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상설특검으로 갈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한국당은 별도의 특검법을 이미 발의했고 바른미래당도 별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경수, 흔들림 없는 일정 소화

드루킹 사건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21일 오후 경남 고성군 같은 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새 원내대표·국회의장

### 내달 11·16일 후보 선출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다음달 11일과 16일에 각각 하기로 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지난해 선거에서 우월시 현 원내대표에게 패한 홍영표(3선)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또 2016년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던 노웅래(3선)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22일 현재 원내 1당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의장 후보를 낼 자격을 갖춘 민주당에서는 6선인 문희상·이석현 의원, 5선인 박병석·원혜영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여기에 7선 이해찬 의원이 출마할지도 관심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임우진 민주 탈당...광주 서구청장 무소속 도전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광주 서구청장 재선에 도전한다.



임 청장은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현역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당내 경선 배제 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광주·전남 유일 현역 기초단체장이 됐다. 이에 따라 현역 프리미엄을 지닌 임 구청장이 민주당 일색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22일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 구청장은 "민주당 지도부의 후보 검증이 지역 민심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한 공천 학살 적폐이다"면서 "반드시 당선택 당으로 돌아와 민주당을 개혁하고 쇠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청장은 광주시당 후보 검증에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게 문제가 됐지만 소명을 통해 '부적격 예외자'로 인정돼 중앙당 최고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두 차례 보류 끝에 최종 부적격 처리됐다. /오광록기자 kroh@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